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재정 적극 투입 고용한파 이겨 나가야”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업종별·계층별 양극화 심화
직업훈련 등 정책 추진할 것
1분기 일자리 90만개 창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통계 작성에 나선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1월 취업자도 98만2000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악화한 고용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일자리의 양극

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기회 대폭 확대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청년·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대책 마련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간·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여건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펍리스 반도체 IP 할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펍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가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설계자산(IP)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인 시놉시스는 국내 펍리스에 할인된 가격으로 반도체 IP를 제공한다. 반도체 IP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

을 뜻한다. 설계지원센터는 시놉시스와 국내 펍리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가격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할인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 IP를 활용한 플랫폼도 마련된다. 반도체 설계 서비스 기업인 디자인하우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국 기업인 ARM의 반도체 IP 활용 방법 컨설팅을 국내 펍리스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가상의 플랫폼 보드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펍리스가 원하는 IP의 시뮬레이션과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맞벌이 여성 95% “가사근로자법 필요”

고용부, 가사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찬성 이유 67% ‘근로자 신원 보증’ 아쉬웠던 점 32% ‘종사자 신원 보증’

육아·가사도우미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3일~22일 까지 모바일과 이메일 방식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기존 가사서비스 이용시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

는 방식과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토록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과 서비스 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요금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나 휴가 등 노동법상 근로 조건을 보호받는다. 다만, 현재처럼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된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여성근로자 대다수(94.6%)는 제공기관 인증 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

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찬성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가사근로자 신원 보증’(67.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 인증 제공기관이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16.1%),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병무청, 고등학교 퇴학자도 ‘현역병’으로 입영

병역판정검사 개정 검사규칙 적용

병무청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면, 종래에 현역 판정을 받지 않는 청년들도 현역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

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평균 학력이 높아진 점, 병역복무에 따른 가산점, 호봉불인정 등 사회재진출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규칙을 완화된 것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 자원 확보에 군 당국이 어려움에 봉착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징집율은 이미 2013년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 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야전 지휘관들은 높은 징집률로 인한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 지휘관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능력이 저조하거나 타 장병보다 학습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병이 늘어나게 되면,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강원도 민통선서 미상인원 신병 확보

합참, 검문소 일대 CCTV에 포착 “조사 후 세부내용 추가설명 할 것”

강원도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민통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이 발견돼, 22사단 지역 최전방 경계의 어려움 재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을 발견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22사단 56여단 경계책임구역 내인 제진검문소 일대로, 검문소 일대에 설치된 CCTV로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돼 군은 ‘진돗개’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된 위치는 최전방 경계철책 이남의 검문소로, 통일전망대와 GOP둘레길을 방문하는 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신원미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월북을 시도했거나 길을 잘 못 들었

을 가능성, 북측에서 월남한 귀순자이거나 침투인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56여단 지역은 과거에도 내륙1소초와 해안1소초 일대에서 북한의 침투와 귀순자가 발생한 곳으로, 최전방경계 지역 중 가장 경계근무가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의 통상적인 침투로가 아닌 22사단 55연대 일대로 신원미상자가 철책을 끊고 철책선을 넘어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은 56여단 경계책임구역에 비해 지형이 험난해 북한으로부터의 침투나 귀순이 어려운 지역이다. 당시 신원미상자는 북한측 고성군이 아닌 험준한 산악지대를 긴 금강군에서 우리 군의 경계철책을 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11월 신원미상자의 월책 사건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험준한 산악지역과 길게 뻗은 해안지대를 함께 경계해야 하는 22사단의 경계부담은 크



/뉴시스 그래픽

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구조 개편과 편제 병력 감축 등으로 과학화 경계 강화의 헛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과 인접한 23사단을 해체할 예정이어서 22사단의 경계 부담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6여단과 22사단 수색부대 출신의 예비역장교들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내륙과 해안이 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관광객과 방송보도 인원들로 인한 보안사고 및 경계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군 당국과 정부가 장병들의 경계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계근무 피로도를 낮춰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형철 기자